

<IFS 국가 정책 제안>

경제적 번영을 위한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 전략



본 보고서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2주년 기념 정책 보고서
“경제 번영을 위한 신강대국 전략: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을 정리한 것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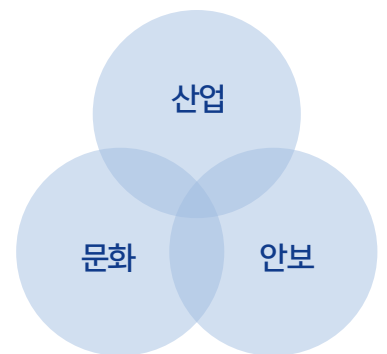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 전략

국가의 경제 번영을 위한 전략 방향

-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
- 이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 수준의 강대국에 올랐음.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위험 등 국제정치적 도전 요인에 직면했음.
-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상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됨.
- 한국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후퇴하거나, 아니면 국제정치적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위대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음.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 경제적 번영은 과거에 머문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네트워크에 달려 있음.
- 근대 강대국 사례에서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 정체성을 취할 경우 외부 세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치명적 문제를 갖기 때문임. 국가와 민족의 영광, 혹은 치욕의 극복을 위해 외부 세계와 전쟁과 갈등을 벌이며 국력을 스스로 소진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릴 수 있음.
-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는 통상의 자유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이러한 경제적 번영을 다른 국가들과 협력 관계 속에서 공유해갈 수 있음. 영국, 미국 등은 지구적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위대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음.
- 본 보고서는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라는 관점에서 혁신 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 발전 전략과 문화산업 진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그리고 한국의 경제, 통상 네트워크의 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해양 안보 전략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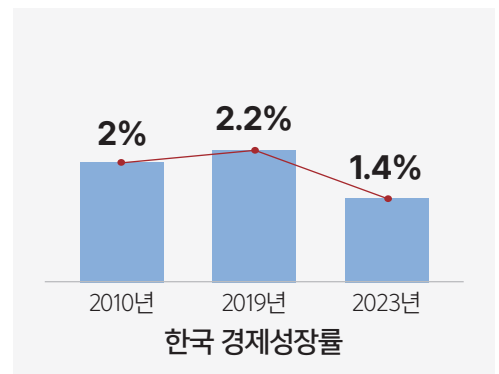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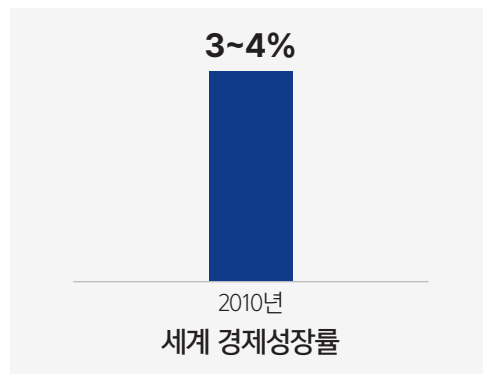


2

산업 전략: 혁신지대론과 생산기지론

한국 경제 성장의 정체

-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3~4%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2%대에 머물렀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 2.2%이었고, 2023년엔 1.4%로 더욱 떨어졌음.
-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소 주도 성장 단계나 투자 주도 성장 단계를 넘어서서 기술 혁신에 입각한 혁신 주도 단계로 이행해야 함.
- 첨단 기술 개발과 이에 기반한 산업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 혁신 주도 단계에서 기술 기업들의 혁신 역량은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요인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국제정치적 도전

-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첨단 기술 혁신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혁신 발전 전략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나선 것임.
- (공급망 위험의 심화) 자유무역주의 퇴조와 기술 보호에 초점을 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확대됨.
- 한국은 미중의 첨단 기술 경쟁과 공급망 위험이라는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혁신지대와 생산기지의 이원적 접근 전략을 제시함. 세계적 기술 기업이 한국의 혁신지대에서 혁신적 산업을 일구어내고, 전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혁신적 제품을 생산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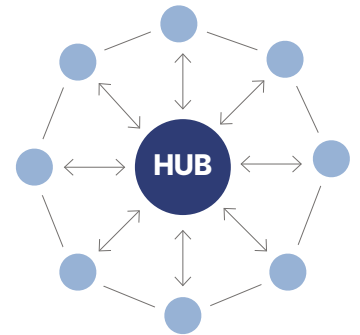
|(대내적 차원) 한국의 혁신지대 구축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1위		싱가포르 (Singapore)
2위		핀란드 (Finland)
3위		미국 (USA)
4위		네덜란드 (Netherlands)
⋮		
25위		한국 (South Korea)

-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는 25위였음. 싱가포르(1위), 핀란드(2위), 미국(3위), 네덜란드(4위), 영국(8위), 독일(13위), 대만(14위) 등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혁신지대 구축에서 '실리콘밸리'와 '선전'이라는 두 혁신지대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리콘밸리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인재풀이 존재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체제 등 혁신 생태계를 형성했음. 선전에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생태계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식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에서의 혁신 환경을 한국에 구현하는 정책이 필요함. 전세계의 혁신 기업 기업들이 진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자유롭게 개방된 혁신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임.
- 실리콘밸리, 선전과 같은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음. 첨단 기술 인력의 유목민화, 세계적인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혁신 거점화,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형성 등의 정책들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제도적 인프라 차원에서,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토대를 구축해야 함.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제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이뤄져야 함.

|(대외적 차원) 지구적 생산기지 보호

- '바퀴살(Hub and Spoke)' 생산기지론은 궁극적으로 경제 영역의 확보 전략이며 기존에 한국이 추진해 왔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넘어선 전략임.
- FTA를 통해 선(border line)을 넘었다면 이제는 터(site)를 확보하여 경제혁신을 위한 공간(space)을 확대하는 것임.
- 민간 주도의 제조, 투자 및 R&D가 연계되어 글로벌 거점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물류를 기반으로 통상으로 연계되는 형태가 수레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 한국은 각각의 글로벌 거점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허브(hub)가 되어야 함. 각 글로벌 허브의 입지가 정해지면, 한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일종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퀴살 형태의 방사형 생산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바퀴살(Hub and Spoke)>

* 김정균.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Trade Brief』 Vol.22, 2017.7. 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

문화 전략: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산업 육성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공과 한계

-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중예술 콘텐츠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어왔음.
-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은 영화·드라마에서는 넷플릭스, 음악에서는 아이튠즈, 영상·음악 콘텐츠에서는 유튜브 등 글로벌 문화 플랫폼에 기반해 성장한 것이었음.
-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플랫폼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함. 한국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의 원천인 웹툰 콘텐츠는 네이버, 다음 등의 웹툰 플랫폼을 통해 급성장할 수 있었음.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 넷플릭스의 이 같은 초국가적이며 개방적인 창작 체계는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음.
- 넷플릭스는 투자 과정에서 세계 각 국가의 영화 창작자에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음. 넷플릭스는 스페인에서 만든 '종이의 집',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나르코스',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 등 미국이 아닌 국가의 지역 창작자를 동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음.
- 개방적 플랫폼 전략을 통해 만사한통(萬事韓通: 모든 일은 한국으로 통한다)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음. 성공적인 대중예술 플랫폼 구축만이 세계 대중문화 산업 시장에서 한국을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게 할 것임.

대중문화 플랫폼 산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플랫폼 산업의 육성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해야 함.
-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 존중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창작자 사이의 합리적인 이해 관계를 조율해나가는 역할이 필요함. 플랫폼 사업자는 개별 창작자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창작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함. 세계 각국의 문화적 창작물이 한국의 대중문화 플랫폼을 통해 생산, 유통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개방성과 자유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원의 방송·상영·출판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넷플릭스는 스페

4

안보 전략: 번영 네트워크의 안보적 위협 관리

경제적 번영의 안보적 조건

- 글로벌 혁신·생산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국의 해양 전략은 한국의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임. 현상 타파적 성격의 중국과 현상 유지적 성격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력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은 해양 안보 위협에 직면함.
- 대만 해협 위기, 남중국해 분쟁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확대 등 현실적인 안보적 불안 요소가 강화됨. 한국은 물류의 대부분을 해양 수송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안보적 위협은 산업, 통상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요소임.
- 지금까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이라는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해왔으며, 이러한 공공재는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해 유지되어 왔음. 문제는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중국의 해양력 확대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함.
-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은 양자적 차원과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양자적 차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

-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했던 해양 안보 질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미국의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 및 우방국, 역내 기구들의 집단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임.
- 한국은 그동안 대북 역지력에만 국한해 왔던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
- 미국 해군 전력의 인도·태평양 지역 접근에 대한 정찰, 호위, 네트워크 등 방어적 성격의 군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박·수리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이러한 해양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체 및 첨단 기술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구됨.
- 나아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해군기지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다자적 차원) 해양 안보 협력체 구상

-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 특히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함.
- 한국은 해양 안보 협의체를 구축해야 함.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 합동 해군 훈련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해상 통제 시도를 억지하는 한편, 유사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둠.
- 다만, 한국이 해상 교통로에 대한 공동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협력을 구축해나갈 수 있음.